

## 독일 연방하원 앙케이트위원회 보고서

조 영 조\*

- I. 발간 경위
- II. 「독일통일실태 보고서 I~III」 개요
- III. 「독일통일실태 보고서 I」 주요 내용
- IV. 「독일통일실태 보고서 II」 주요 내용
- V. 「독일통일실태 보고서 III」 주요 내용

### I. 발간 경위

독일 하원은 제12대(1990~1994) 및 제13대(1994~1998)에 걸쳐 통일 이후 동독 공산당 독재를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앙케이트위원회’를 6년(1992~1998)간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통일전 서독의 대 동독 지원현황과 통일후 동독지역의 변화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1995년 및 1999년 2차례에 걸쳐 총 17부 32권 28,948 쪽의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프랑크푸르트사무소를 통하여 동 보고서를 입수하였으며, 통독 경험 연구를 통한 효율적 대북지원·협력 방안 모색을 위하여 발췌 번역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총 3권(603쪽)을 발간하였다.

### II. 「독일통일실태 보고서 I~III」 개요

「독일통일실태 보고서 I」은 경제분야로 동서독 이전지출, 내독교역, 구동독 화폐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조사팀장

제도 및 통일 이후 화폐통합과정을 다루고 있다. 통일 이전('73~'89년간) 서독의 대동독 이전지출은 총 917억 DM으로 나타났다. 동 금액에는 차관지불보증액 및 Swing을 통한 교역지원액 등은 제외되어 있다. '내독교역' 편에서는 동서독 교역의 법적 근거와 양독이 상호간 거래에 대해 부여하고 있었던 정치·경제적 의미 등을 분석하고 있다. '화폐통합'편에서는 분단기간 중 동독의 화폐·금융제도의 발전과 동서독 화폐통합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독일통일실태 보고서 II」는 정치·사회적 분야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 붕괴 과정, 서독 망명인과 이주민 상황을 다루고 있다. '베를린장벽 붕괴 과정' 편에서는 동독주민의 여행자유화 요구로부터 촉발된 동독의 혁명이 어떻게 베를린장벽 붕괴로 이어졌는지를 동독 정권의 상황 인식과 대처방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베를린장벽의 붕괴는 동독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동독 공산당 공보비서 샤보브스키(G. Schabowski)가 해외여행 간소화 법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 질의에 미숙하게 대응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독 이주민' 편에서는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유형을 합법적 이주민, 망명자, 월경자, 기타(정치범 석방거래자) 등 4가지로 나누고 서독에서의 정착 및 통합과정을 설

명하고 있다.

「독일통일실태 보고서 III」은 통일 이후 공공부문의 인력통합과정을 부문별(국경수비대, 노동행정청, 인민군, 판·검사, 교사, 경찰관)로 다루고 있다.

### III. 「독일통일실태 보고서 I」 주요 내용

#### 1. 동서독 이전지출

통일이전(1973~1989년간) 서독의 대동독 이전지출은 총 917억 DM이며, 지출 주체에 따라 민간(692억 DM, 75%), 교회(56억 DM, 6%), 서독정부(169억 DM, 18%)로 구분되며, 수급자에 따라 동독 정부에 대한 이전(210억 DM, 23%)과 동독 주민 개인에 대한 이전(707억 DM, 77%)으로 구분된다.

민간에 의한 대동독 이전 유형으로는 소포, 현금 및 물품 직접전달, 도로이용료, 강제환전금, 징수금 등이 있으며, 교회에 의한 대동독 이전 유형으로는 물자지원, 교회사업 등이 있고, 서독정부에 의한 대동독 이전 유형으로는 의료지원, 도로사용료, 우편료 지불, 투자, 정치범 석방 등이 있다.

1982년 보수당이 집권하기까지 보수당은 이전지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였고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주요 논조

는 “연방정부가 아무런 성과 없이 동독에 너무 많이 지불한다.”는 것이었고, 시위문구에는 “우리는 내고 또 낸다.”라는 것도 볼 수 있다.

서독의 대동독 이전지출은 통일 논의에 대한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통일정책에 기여하였는 바, 민간지원은 양독의 연대감 및 독일인이라는 동질감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교회차원의 지원은 동독내 시민운동의 전초기지 마련에 효과적이었다.

한편, 서독의 이전거래 지원은 흔히 추측하는 바와는 달리, 동독 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은 아니었다. 서독으로부터의 이전액(연평균 34억 DM)은 동독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GDP(1,775억 DM)의 1.9%에 지나지 않았다. 서독의 이전지원은 무역적자 등으로 인한 이자상환액이 연평균 40억 DM에 달하고 있던 동독을 유동성 위기에서 구해낼 수는 있었으나, 동독 경제를 제대로 세울 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비록 서독으로부터의 이전액이 동독 경제를 제대로 세우기에는 부족하였으나, 내독 방문 증가 등을 통하여 동독체제를 서서히 붕괴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서독의 이전거래 지원이 없었다면 동독은 더욱 더 고립되었을 것이고, 동독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더욱 낮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구소련의 영향력이

더욱 더 커졌을 것이며, 동독은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했을지도 모른다. 대외지급능력 악화가 동독의 붕괴를 야기할지에 대해서는 동구에서 경제문제가 체제위기로 이어진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 내독교역

내독교역은 동서독관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계로 근원과 법적토대로 볼 때 전례 없는 특이한 것이었다. 내독교역은 순수 국내무역도 아니었고 국제무역도 아니었다. 이 특별한 상황은 독일을 점령기간 중 하나의 경제단위로 다루기 위한 포츠담협정에서 승전국들의 기본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특별한 상황은 1993년 10월 2일 점령기간의 법률상 만기일까지 유효했다. 그러므로 구서독에 대해 내독 무역은 해외무역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내독교역은 동서독 양국에서 다른 비중을 가졌다. 구서독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면이 앞섰으나, 동독측에는 매우 큰 경제적 의미를 가졌다. 서독의 에르하르트(L. Erhard) 수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동독과의 비즈니스보다는, 동독인들과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동독에 있어서 서독은 대외무역의 약 15%를 점유하는 구소련 다음의 큰 교역상대였으나, 서독측에서는

내독교역을 통한 해외무역 비중은 2% 이하였다. 동독은 내독교역이라는 특수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다른 COMECON(동유럽경제상호원조회의) 국가들은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내독교역의 이익을 양적으로 측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80년대 초 국제수지 위기시 동독경제를 안정시키고 동독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준 것은 사실이었다.

서독에게 동서독 무역은 대외 경제적 의미는 덜하지만, 국내 경제적 의미는 과소평가할 수 없었다. 1978년 내독 무역에 관련된 기업의 80%가 중소기업이었다.

### 3. 구동독의 화폐제도 및 화폐통합 과정

동독의 화폐제도와 신용제도는 소련식을 따른 결과, 중앙관리경제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화폐 발권과 신용 공여 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한 국가독점체제를 유지하였다. 국가가 물가를 고정해 놓음으로써 생기게 된 억압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장의 구매력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동독 마르크화는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잃게 되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던 서독 마르크화가 병행통화로서 점점 더 중요성을 얻게 되었다.

동서독 화폐통합시 동서독 마르크의 교환 비율은 임금·봉급·연금·임차료·공과금

등은 1:1로, 채무는 2:1이었다. 은행계좌에 입금한 예금은 14세까지는 2,000마르크에 한해서 1:1, 59세까지는 4,000마르크에 한해서 1:1, 60세 이상은 6,000마르크까지 1:1로 교환하였고 초과금액은 2:1 비율로 교환되었으며, 1990. 6. 30까지의 은행잔고가 1989. 12. 31 잔고를 넘어서면 3:1로 교환되었다.

동서독 전체 통화영역에서 화폐통합에 따른 서독마르크의 통화량 증가는 M3(현금통화+요구불예금+4년 이하의 금융채권+단기저축성예금 등) 기준으로 약 1,600억 DM이었다. 동 금액은 M3의 13%에 달하는 수준으로 동독의 생산잠재력 추정치(서독 경제규모의 10~11%) 보다 다소 높은 수치였다.

동독 생산잠재력에 대한 무지, 화폐정책 인프라 미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극복됨으로써 동서독 화폐통합은 서독 마르크의 화폐가치 변동 없이 완성되게 되었다.

## IV. 「독일통일실태 보고서 II」 주요 내용

### 1. 1989년 11월 9일의 베를린

1989년 11월 9일 저녁,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민주공화국(구동독)은 종말

을 고하기 시작하였다. 1961년 8월 13일 이후 설치되었던 베를린장벽은 동독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으나, 붕괴되기 직전에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내적으로는 동독주민의 여행 및 이주 신청 증가, 외적으로는 인권문제(여행 및 이주의 자유 포함)와 경제적 지원을 결부시킨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결의 등 베를린장벽 붕괴에 대한 압력이 대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 동독에서 서독으로 가는 방문자와 여행자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동독주민의 이주신청은 1986년 7만건, 1987년 11만 2천건으로 증대한 반면 이주 허가는 1985년 20,417건, 1986년 16,902건, 1987년 10,420건으로 감소하였다. 동독주민의 비사회주의 국가로의 여행은 1987년 1,297,399명, 1989년 9월까지 1,314,912명이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1987년 0.23%, 1989년 1/4분기 0.36%, 2/4분기 0.64%, 3/4분기 0.93%로 점차 증가하였다.

동독주민의 이주 및 국외여행은 동독정부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 이외에도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였다. 1989년 동독주민의 이주로 인해 GDP 20억 마르크가 감소하였으며, 서방국가로의 여행을 위해서는 동독 마르크가 서방에서 환전되지 않으므로 동독정부에 의한 추가적인 외화조달이 필요하였다.

한편, 1987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속개된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소련의 입장은 국내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서방의 군축 및 인권 문제 진전과 경제지원 연계전략에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에서 1989년 9월 10일 헝가리 정부가 오스트리아의 국경을 개방함으로써 동구를 경유한 서독으로의 탈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독정부는 이로 인해 다시 개방압력에 부딪히게 되었고, 서독은 헝가리정부에 대해 국경개방의 대가로 5억 마르크의 차관 제공, 입국사증 면제, EC 가입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에 더하여, 동독의 대서방 부채가 1970년 20억 마르크에서 1989년 490억 마르크로 급증함에 따라 지급불능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독경제가 더 이상 기체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동독주민의 생활수준을 25~30% 낮추어야 하는 상황속에서 1989년 11월 9일 정치국 중앙위에서는 해외여행 간소화를 위한 새로운 여행법 제정을 논의하게 되었다. 당시 공보담당 샤보브스키(G. Schabowski)는 전날 정치국원에서 해임되어 중앙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여행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국제기자회견을 실시하게 되었다. 기자회견 말미에 이탈리아 통신사 ANSA의 특파원인 리카르도 에르만(Ricardo Ehrman)이

“여행법이 언제부터 유효한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샤보브스키는 여행법의 시행을 위해 내부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즉시, 지체하지 않고 발효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TV를 통해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동독주민들이 베를린장벽으로 몰려가게 되었으며, 국경검문소에서 이를 통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베를린장벽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다.

## 2. 망명인과 이주민의 서독 편입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 온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4그룹으로 구분된다. 동독정부의 허가를 받아 서독이나 서베를린으로 이주한 ‘이주민’, 동독을 떠나 동독정부의 허가 없이 서독이나 서베를린에 체류한 ‘망명자’, 위험을 무릅쓰고 서베를린 및 서독으로 넘어온 ‘월경자’, 정치범 석방거래의 대상자인 ‘기타’로 구분된다.

베를린장벽 축조는 이주민의 수를 줄일 수는 있었지만 월경을 완전히 봉쇄하지는 못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동독지역을 떠나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주민은 4,619,331명에 달하였다. 이는 신연방주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작센주의 인구수보다 많은 숫자였으며, 1989년 동독 인구가 16,675,000명이었으므로 동독은 1945~1989년 사이

에 인구의 28.1%를 잃게 되었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전쟁 말기부터 1948년 말까지 732,100명, 1949년부터 베를린장벽이 구축되는 1961년 8월 12일까지 2,686,942명, 1987년말까지 576,219명, 1989년 11월 9일 전후까지 343,854명, 1990년 6월 30일까지 258,384명이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동독 이주민에 대한 서독주민의 태도는 초기의 부정적 관점에서 점차 우호적으로 변화하였다. 1947년 바르부르크(Warburg) 수용소 소장은 동독 탈주민들을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하였으며, 1949년 연방 내각 회의록에는 “공공질서에 해로운 자”로 적혀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84년 연방의회 의장이었던 필립 예닝거(Philipp Jenninger)는 “우리는 넘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반긴다.”라는 태도로 바뀌었다.

동독 이주민들이 서독에 정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80년대 무주택자 비율에서 동독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14%로 전체 인구에 대한 무주택자 비율보다 높았다. 무주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동독 출신은 41세에서 50세 사이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서독인은 30세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4년 이상 무주택자비율은 동독 출신이 64%를 차지한 반면, 서독 출신은 55%에 그쳤다.

## V. 「독일통일실태 보고서 III」 주요 내용

### 1. 동독 국경수비대 종사인력 인계

1990년 3월 18일 동독 자유총선에 의해 민주적으로 구성된 드 메지에(de Maiziére) 정부는 연방국경수비대를 본받아 약 7,600명의 막강한 병력으로 편성된 동독 국경수비대를 새로이 창설하였다. 통일 독일정부는 1990년 10월 3일 통일과 함께 동독 국경수비대원 7,156명을 검증절차를 통해 인수하였다.

통일 독일정부는 통일조약(EV: Einigungsvertrages)의 “과거 국가안전부 활동을 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노동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공직에서 특별 해고를 당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인수 인원중 일부를 해고하였다.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①진압·공작활동과 같은 전형적인 국가안전부 업무에 속하는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자, ②위협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협력한 자, ③국가안전부의 비공식 정보요원(IM : inoffizieller Mitarbeiter)으로 활동하였더라도 제3자 피해가 경미한 자, ④1980년 이전에 국가안전부 협력을 끝낸 자 및 청소년기 군대 복무로 국가안전부에 근무한 자는 재고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동독 국경수비대원 약

1,100여명이 해고통보를 받았다.

### 2. 동독 노동행정분야 종사인력 인계

독일 연방노동청이 동독 노동청으로부터 인수한 인력은 10,600명이었다. 1996년 11월 1일까지 총 5,165건이 국가안전부 자료 보관소에 조회가 의뢰되었으며, 이 중 430건이 국가안전부와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수한 인력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①모든 직원에 대하여 “당신은 국가안전부나 국가수호청 직원이었습니까?”라는 설문을 실시, ②연방노동청에 독립적인 인력감정단(PGG : Personalgutachtergruppe)을 설치하여 직원들의 정치적 과거사를 규명, ③모든 노동청장 및 간부에 대한 검증 실시, ④ 신원조회 결과 문제가 있을 때는 협력활동의 종류와 범위, 협력이유, 협력기간 및 시기, 제3자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해고 여부를 판단하였다.

### 3. 동독 인민군의 연방군 편입실태

1990년 10월 3일 동독 인민군이 연방군으로 편입될 당시 인민군내 민간인력은 인민군 해체직후 병무행정직으로 전환한 약 2,000명의 군인을 포함하여 약 50,000명이었다. 이 중 약 1,600명은 통일조약의 규정에 따라 퇴직하였으며, 1996년 8월 31일

기준으로 20,305명이 군무원으로 종사했다.

편입된 모든 군무원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28,822건 중에서 4,023건이 국가안전부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483건에 대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며, 1,942건에 대해서는 해체계약 체결(공공부문을 제외한 분야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 51명은 해고되었다.

동독 인민군의 연방군 통합의 근거는 1990년 8월 31일의 통일조약 부록에 포함된 군사법 관련규정이며, 이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였다. 동독 인민군의 직업군인과 의무군인은 통일조약에서(1단계)대기 상태 또는 추가 지원, (2단계)2년 동안 기간제 군인으로 편입, (3단계)장기 복무나 직업 군인으로 편입이라는 3단계 절차를 거쳐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다.

1990년 10월 3일 통일과 함께 연방군은 약 9만명의 동독 인민군을 인수하였는 바, 징집병 39,000명, 대기발령 군인 1,000명, 추가지원 군인(직업 군인) 50,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방군은 동독군을 인수함에 있어 지원절차를 통해 선발하였으며,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연방군으로의 실질적 편입대상은 추가지원 군인 50,000명이었는 바, 두 차례 지원 및 선발과정을 통해 10,800명이 잔류하게 되었다(1993년 9월 30일 기준 : 영관급 365명,

기타 장교 2,685명, 하사관급 7,550명, 기타 병사 200명).

동독 인민군 편입과 관련하여 연방군은 국가안전부 자료보관소에 약 13,100건을 문의하였으며, 그 결과 539명의 장교와 916명의 하사가 해고되었고, 500명의 장교와 530명의 하사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전체 동독군 숫자에 비하여 국가안전부 활동 연루로 인한 해고율이 높지 않은 것은 연루자들 스스로가 근무기간 연장이나 연방군 편입에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4. 동독 인민군의 연방군 편입 문제

동독 인민군 편입과정에서 연방군은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독 인민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독 인민군은 오랜 기간에 걸친 사상교육을 통해 연방군(적대계급)에 대한 강한 증오심을 세뇌 받아 왔다. 동독 인민군의 편입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은 동독 고위장교의 공산당 가입률이 높다는 것도 한 원인이었다. 동독군 장교의 96%, 사관후보생 94%, 직업장교 60%가 동독 공산당의 당원 내지 후보였다.

동독 인민군 편입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동독 인민군은 현재까지도 '패배자'라는 심리적 불만을 가지고 있다. 주요 불만으로는 ①동독군 지도부에 대한 언론과 정치계의



비방 및 명예훼손, ②학력 불인정, ③과거 직업군인의 공공분야 활동금지, ④퇴역 계급 사용금지, ⑤연금단축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5. 동독 공직인력의 연방정부 편입 실태

원칙적으로 모든 교사와 경찰, 판사와 검사들은 1990년 10월 3일 이후에도 스스로 퇴직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근무가 가능하였다. 다만, 통일조약에 의거 일반해고와 특별해고가 가능했다. 일반해고는 전문지식 부족, 개인적 적합성 부족, 수요 부족, 현재 근무관청이 소멸된 경우 가능하였으며, 특별해고는 무기한 가능하였는데, 인도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구동독 국가안전부 활동이 판명된 경우 적용되었다. 이러한 해고기준을 근거로 고용된 공무원을 언제,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는 주정부의 몫이었으나,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적합성, 자격, 전문능력에 관한 검증은 공무원 임용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다.

신연방주 정부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연방정부공무원법을 토대로 자체적인 공무원법을 제정해야 하나, 통일조약은 1996년 말까지 예외를 허용하였다. 독립적인 공무원법 제정시까지 신연방주 공무원은 수습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며, 수습기간은 3년

이었다.

판사와 검사의 검증을 위해 모든 신연방주에 판사선출위원회와 검사임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심사위원은 각 17명으로, 이들은 여당과 야당에서 파견된 최고인민회의 의원 각 1인, 군 의회 의원 및 시 참사회 의원 10명, 각 지역에서 선출된 판사와 검사 5 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검증기준은 ①자유·민주주의·연방주의·사회복지·법치국가에 대한 충성심, ②도덕적·정치적 무결점, ③직업윤리 등 세가지였다. 주정부마다 편입비율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판사(681명, 38.3%)가 검사(399명, 32.2%)보다 더 많이 편입되었다. 이들에게는 3년간의 수습기간이 부여되었으며, 1,080 명의 구동독 법조인 중 수습기간에 48명의 판사와 21명의 검사가 퇴직하였다. 동독 법조인 검증을 통한 편입을 통해 사법부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으며, 신연방주 사법부 재건에 구동독 법조인들을 통합하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동독지역의 교사는 연방공무원이 아닌 관계로 주정부에서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기준은 통일조약에서 명시한 ①전문능력, ②개인적 적합성, ③수요, ④인권 위반, ⑤국가안전부 활동 등이었다. 구체적인 검증기준은 주정부별로 상이하나 위원회를 통하여 검증을 했으며, 교육위원회 및 자유독일청 소년단 간부들은 중점 심사 대상이었다. 검

증을 받은 총 22만명 중 신연방주(베를린 제외)에서 해고된 인력은 19,500명으로 8.8%에 불과하였다. 해고사유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전문능력의 부족이었고, 국가안전부 활동 연루로 인한 해고는 전체 해고의 약 10%수준이었다. 1차적 심사기준은 특정 직책이나 과목과 같은 외부적 요소였다.

동독 인민경찰은 통일과 함께 자동적으로 해당 신연방주에 채용되었다. 경찰은 민감한 행정분야로 공무원 신분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었다. 경찰의 검증 방법 역시 주정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카드와 설문지 등을 통하여 편입을 결정하였다. 작센주의 경찰 편입 통계 부재로 전체적인 편입비율 파악은 곤란하나, 국가안전부 자료보관소에 약 56,000건이 조회되었으며, 이 중 3,000건 이상이 국가안전부 활동 연루로 해고되었고, 조기 퇴직

및 구조개혁 등으로 떠난 경우도 있어 편입되지 않은 인원 모두가 부정적 사유로 해고된 것은 아니었다. 대다수의 인민경찰은 편입되었다.

법치국가적 측면에서의 검증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로는 개별사건 검증의 원칙, 투명성, 법정신문의 객관성, 검증의 심급제 등이 있으나, 주정부에 따라 적용에 차이가 있었다. 검증에 있어서 주요한 기준으로는 '사회적 평화 및 화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편입배제만이 해결책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관계자의 적대적 태도로 인해 검증절차가 의심받기도 하였으며, '힘없는 자들은 붙잡고, 권력 있는 자들은 달아난다.'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K**